

박준영 '미션 임파서블' 영국행

F1 최대난제 개최권료 인하 담판 지을까

국제자동경주대회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의 개최권료 재협상이 F1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F1대회 조직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다음주 영국 런던에 방문해 F1 운영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의 베니 애플레스턴 회장과 개최권료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1대회 조직위가 재협상에 나선

것은 올해 FOM에 지급한 개최권료와 TV 중계권료가 각각 480억원과 160억원으로 두 가지 기본 비용 만하더라도 640억원으로 F1 총 지출액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은 5년동안 매년 개최권료가 10%씩 오르게 돼 있어 개최권료 재협상 없이는 적자 대회인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지속 개최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

하지만 박지사가 재협상에서 성

과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FOM의 최고 실력자인 베니 애플레스턴 회장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측의 재협상 요구에 강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국이 대회를 열 여유가 없으면 그만 아니냐"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한국이 대회를 중단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해 F1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FOM의 자신감이 배어있다.

또한 내년 대회 개최를 위한 신용

등차업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FOM도 코리아 그랑프리를 중도하차 시키기가 쉽지 않고 1년 동안 개최할 수 있는 그랑프리 횟수가 20회 안팎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을 중도하차 시킬 경우 잃는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F1 전문가들은 재협상을 통해 얻어낼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실무자 중심의 협상에서 F1대회 조직위 수장이 직접 재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1년치 개최권료 할증(10%)만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재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협상에 나선 박지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예산 확보 출발 순조

국회 상임위 F1 운영비 144억 추가, 문화전당 건립비 624억 증액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확보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차질 없이 반영시키기 위해 지역 정치권의 '찰떡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8일 국회 각 상임위 예결소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거나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 확보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문방위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비를 당초 정부안보다 624억원이 늘어난 1200억원으로 증액했고 광주 아빈폴리 사업 예산 50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여기에 정부안에 없었던 F1(국제 자동경주대회) 대회 운영비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예산도 234억원에서 433억원으로 증액됐다.

농수산식품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암호 톨선문

◇상임위 신규반영 예산

영암호 톨선문 확장 701억원
광주~완도 고속도 98억원
광주어빈폴리 50억원
도시광산기술원 건립 5억원

◇상임위 증액 예산

광주U대회 234억→433억원
과학벨트 325억→650억원

확장 사업 예산 701억원이 반영됐고 국토해양위에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산 9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지식경제위에서는 광주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정부안에서 누락했던 '한국도시광산기술원 광주 건립사업(총예산 2000억원)' 예산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경위에서는 광주 R&D 특구 내의 이노비지니스 센터 건립, 호남권 뿐만 아니라 산업 구축, 종소상공인 통

합률센터 건립, 지식정보센터 건립 등의 신규 사업 예산 등도 반영됐다.

한편,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3.5 GeV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사업 예산(총 5000억원) 반영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일단,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과위에서는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9일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 과학벨트 예산은 정부가 325억원을 배정한 가운데 교과위에서는 650억원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예결위에서 상임위가 반영한 예산을 지켜느냐 여부다. 상임위에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은 신규로 책정하거나 증액한다고 해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찰떡 공조'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민주당도 측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869명중 30%만 "아파트·주택 구입"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 여전히 꺼린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가 여전히 가족과의 동반 이주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료·문화·여가시설 등 꽤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8일 나주로 이전하는 15개 이전기관 직원(6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869명의 응답자 가운데 30.3%인 869명이 혁신도시 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단독주택으로 이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을 제외한 1371명(47.8%)은 임대 아파트를 빌려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전 가족이 이주하는 형태가 아닌, 자녀를 두고 배우자와 이주하거나 '나홀로 이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나마 629명은 아예 혁신도시 인근으로 이주하겠다는 입장은 밝혔다는 점을 들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빌려 생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분양·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이전기관 직원 등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도, 가족 동반 이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이와 관련 '혁신도시 교육여건분석 및 벤치마킹 사례분석'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63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 구성원 중 초·중·고 자녀 비중이 응답자(2539명)의 54.9%를 차지해 양질의 교육시설 확충(56.3%)을 이주시 가장 고려한다는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자족형 교육거점 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옥형 단독주택 분양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해 혁신도시 내 100가구 규모의 명품 한옥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뒷골목 덥힌 사랑의 연탄

8일 광주 남구 월산동 주택가 골목에 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최영호 남구청장, 광주시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저소득층 주민의 집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2007년 분양가 그대로! 놀라셨습니까? 진흥이 싸게 팝니다

사는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되는 명품아파트! 금호 진흥 더 루벤스

발코니 확장 비용 무상

천정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11월 계약자 경품행사			
1등 1명	백화점상품권	100만원	
2등 1명	"	50만원	
3등 5명	"	10만원	

주말 분양사무실
방문 고객께
사은품 증정

THE RUBENS
진흥 더 루벤스

2011년 12월 31일부로
취득세 75% 감면혜택 종료!

금호동 진흥 더 루벤스
분양문의 062) 352-9595

분양세대: 49py 330세대 · 시행사 VISION(주)에스엔에스비전 · 시공사 흐름그룹
분양업체: 흐름그룹
분양업체: 흐름그룹